

‘카공족’...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적극 활용하자

교육의향

장옥중
함평군청소년
문화의집 관장



기관에 근무하면서 손님이 오시거나, 직원들과 잠시 티타임을 위해 기관 근처에 있는 카페를 자주 방문한다. 시간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특히 방학때나 시험기간이 되면 지역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더 많이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본적이 있다. 기사 내용은 2500원 커피 시켜놓고 7시간... 멀티탭까지 챙겨 온 ‘카공족’이라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2500원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7시간 넘게 앉아있는 카페에 장시간 앉아 공부하는 사람을 일컫는 ‘카공족’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관한 내용이며, 전기료까지 올라갔는데 회전을 이 낮아 손해를 보는 상황과, 카공족이 카페 매출에 더욱 지장을 준다는 의견에 대한 기사이다.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필자는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기관에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관의 운영 방향을 정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매년 두 차례의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설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을 통해 모아진 안건들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하는 다양한 창구의 과정 중의 하나이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개별적인 공부가 가능한 스터

디 공간을 설치하였고,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은 자주 활용한 편이다.

하지만 이런 스터디 공간이 모든 청소년들의 욕구를 다 반영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가끔씩 카페를 가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면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다. 맨처음에 청소년들을 카페에서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하였다. ‘왜! 기관에 스터디 공간 마련해 놓았는데, 이용 안하니? 너희들이 제안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이용을 안하거나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앞으로 너희들이 제안하는 건의사항은 더욱더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 ‘큰대’의 모습으로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한 모습이었음을 깊이 반성하게 된다.

예전 필자가 학창시절 때 공부하는 환경은 이렇게 카페가 다양하고 근처에 많이 있지 않는 환경이었다. 독서실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당연히 하는 것이었고, 카페 등은 정말로 공부하는 곳이 아닌 여가를 즐기는 장소였는데, 지금의 환경은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요즘은 공부 환경도 어느 정도의 백색소음이 있어야지 공부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긴 필자인 저 또한 어느 때는 어느 정도 소음이 있어야지 집중이 잘 되는 상황의 공부 환경도 경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된다.

최근에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5년마다 발표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등의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가치관 정립을 위함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역과 현장(전문기관, 학교 등)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핵심은 활동, 복지, 보호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유기적인 연계에 관한 부분이다.

필자가 있는 지역에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교육 전문가인 학교와 청소년 활동 전문가인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 및 보호의 전문가인 지역의 여러 센터들과 상담복지센터 등의 연계일 것이고 특히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에서 원스톱인 하나의 청소년정책이 만들어가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부터가 첫 시작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물론 각자의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구성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작은 지역에서도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영역을 하기 때문에 꼭! 우리만이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영역을 연계하고 기본적인 연계 부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항상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고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다른 곳이 아닌 청소년 현장의 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모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의 시작은 청소년 현장의 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한 고민이 청소년들과 함께 녹아내고 반영이 되며, 주체적인 참여가 된다면 ‘카공족’에 대한 불편한 상황이 기사화까지 되지 않는 걸라 생각되어진다.

더욱더 청소년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더욱더 청소년들의 행복한 여정이 시작되는 삶의 공간으로서 전국의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더욱더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청소년전문가들은 노력할 것이며, 청소년들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해 본다.

社說

‘갈 길 먼 문화중심도시’ 용두사미 만들텐가

국비 반영 22%...콘텐츠 미흡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지역발전 프로젝트’로 주목받던 사업이 이대로 가면 달랑 ‘문화전당’ 하나 건립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정부 당시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특화하겠다는 대규모 국가사업의 현실이 안타깝다.

19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문화중심도시 국비 반영액은 2192억 원에 불과하다. 당초 실시계획 예산인 1조45억 원의 22%밖에 되지 않는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적도시환경 조성사업 또한 계획된 국비 1조3807억 원 중 27.6%인 3816억 원만 반영됐다. 지난해 일몰 기간이 5년 연장되면서 효력은 오는 2028년까지, 프로젝트 유효 기간은 2031년까지 연장됐지만 남은 여정은 불투명하다.

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도 갈 길이 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기준

전국 콘텐츠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콘텐츠 업체 비중은 2.9%로,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에 한참 뒤져 있다. 매출액 비중 또한 0.9%에 불과하다. 문화전당과 함께 광주의 양대 ‘문화 먹거리’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 설립은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광주유세에서 공약으로 내 세운 ‘광주 문화수도 육성’에서 시작됐다. ‘2023년까지 2조 원을 들여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목표로 했던 2023년을 맞은 지금 광주 문화산업은 ‘용두사미’ 처지다. 윤석열 정부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 만큼 정부는 문화수도 조성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몰제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5년이다. 정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광주 문화산업의 성장도대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를 강하게 추동할 수 있는 광주시의 치밀한 전략도 필요하다.

미국발 반도체 위기에 뒤로 밀린 균형발전

정부 수도권 밀어주기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정에서 광주는 338만㎡ 규모의 미래자동차산단, 전남은 고흥에 173만㎡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포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걸으면 미래 지역을 살릴 성장 거점을 마련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속은 우려감이 큰 상황이다. 광주·전남이 지역상생 1호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반도체 몰아주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용인일대 710만㎡에 조성될 국가첨단산단 후보지에 300조원을 투입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판교~기흥~화성~이천~용인~평택을 잇는 기존 반도체 산업 벨트와 연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국가첨단산단만 지정된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같은 정부 구상에 대해 수도권의 들러리만 선게 아니냐는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날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유치 경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지만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반도체 정책 영향으로 많은 비수도권지역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 뒷걸음치게 된 셈이다. 미국발 반도체 보조금 파동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동인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면은 없지 않다. 여야 정치권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3월 통과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등 협치 모양새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강대국 패권 경쟁 때문에 대한민국의 또다른 위기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하고 지방소멸 시기가 앞당겨지는 상황을 맞은 것이 안타깝다. 윤석열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공명불이 되지 않으려면 향후 국가 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에서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기를 촉구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서석대



삼배구고두(三拜九頭)의 삼전도 굴욕은 우리나라의 치욕의 역사로 꼽힌다.

1636년 병자년엔 터진 호란에서 인조 정권은 불과 50일도 버티지 못하고 청나라에 항복했다. 인조는 이듬해 1월 30일 삼전도로 나아가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후 힘없는 조선은 청나라에 조공(朝貢)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조공은 때를 맞춰 속국이 주국에 예물을 바치던 것을 뜻한다.

병자호란이후 조선의 조공은 가혹했다. 청나라는 방물(方物·조선시대에 중국에 보낸 토산물) 외에 세폐(歲幣·해마다 음력 10월에 청에 보내던 공물)를 추가했다. 특히 방물과 달리 세폐는 청측이 강제로 그 양을 책정했는데,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않던 청은 매해 세폐미 1만석을 바치게 했다고 한다. 1644년 북경을 정복한 청은 입관과 함께 식량사정이 더욱 급해져서 호현세자를 통해 겨울 전에 5000석을 조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듬해 2월에는 무려 20만석을 요구했다가 10만석으로 감면해주었다. 조선은 전국에서 300척의 배와 7000여명의 인원을 모아 곡물을 지급해야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대대적인 수탈로 조선의 백성들은 기근 등의 고통을 겪었고, 조선은 국가재정상 연평균 전 20만량 이상의 손실

을, 칙행시에는 40만량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고 기록돼 있다.

민족의 뼈아픈 수탈 역사로 기록될 조공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17일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정부가 지난 6일 강제동원 해법을 공식 발표한 지 열흘 만이다.

일본의 기사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옛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라고 표현했다. 이를 적극 부인해야 할 윤 대통령이 방긋 웃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생중계 됐다.

회견을 지켜본 정치권과 시민들은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상 ‘조공외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 한일 양국은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출 규제 조치까지 바로잡아야 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 일제 수탈의 역사를 망각하고 윤 정부가 한일간 서물외교 복원을 위해 ‘조공외교’를 펼칠 경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안전마저 해치는 흑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김성수 정치부장